

## 라마 10세 시대 태국 경제의 진로와 과제

정재완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이재호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주아세안대표부 파견)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 차 례

1. 푸미폰 국왕 서거와 라마 10세의 승계
2. 태국 경제의 저성장 현황과 주요 배경
3. 태국의 주요 정책 추진 전망
4. 태국 경제의 과제와 시사점

## 주요 내용

- ▶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해오던 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2016. 10)하고 와치라롱콘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2016. 12)함에 따라 태국 경제의 변화와 지속성장 가능 여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푸미폰 국왕 서거로 인한 태국 경제의 위축은 예상과는 달리 제한적이었으며 곧바로 회복
  - 2000년대 이후 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정치·사회적 혼란 지속과 정치적 불확실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외국인직접투자의 저조 등의 영향이 큼.
- ▶ 향후 빠리웃 군사정부는 기존 ‘경제·사회의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군사정부의 정당성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경제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라마 10세 역시 푸미폰 국왕의 자족경제와 왕실사업을 계승함과 동시에 빠리웃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핵심정책: 산업클러스터, 디지털경제, 인재육성 및 R&D 투자 확대, 국제지역총괄본부(IHQ)와 국제무역센터(ITC) 유치, 국경지대 경제특구(SEZ) 개발, 농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인프라 확충 등
  - 2017년 경제정책 주요 내용: 재정지출 촉진, 수출 촉진, 관광산업 회복·내실화, 농촌·농업 지원 확대, 투자촉진 등
- ▶ 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으로는 산업다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비,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순조로운 왕위 계승을 포함한 불안정 종식과 조기 민정이양 등이 중요
- ▶ 태국은 동남아 내에서 2번째로 큰 경제규모, 발달된 제조업 및 인프라 구비, 인도차이나 반도의 허브 국가 등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히 주변국과 크게 개선된 물류 및 연계성 활용, 인도차이나 허브라는 지리적 장점 활용,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참여방안 수립,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진국 탈피 노력 동참 등이 필요

## 1. 푸미폰 국왕 서거와 라마 10세의 승계

■ 2016년 10월 13일 태국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세계 최장기 재위기록을 보유한 푸미폰 아둔야뎃 (Bhumibol Adulyadej, 89세) 국왕이 서거하고, 지난 12월 1일 마하 와치라롱꼰(Maha Vajiralongkorn, 64세)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함.

- 국왕의 정식 명칭은 ‘마하 와치라롱꼰 버딘드라데바이와랑꼰(Maha Vajiralongkorn Bodindradebayavarangkun)’이며, 지난 1782년 시작한 태국 짜크리 왕조(Chakri Dynasty)의 10번째 왕(라마 10세, Rama X)이 됨. 왕위 대관식은 前 국왕의 장례식(2017년 10월 이후 예정) 이후에 거행할 것으로 알려짐.<sup>1)</sup>

■ 푸미폰 국왕의 서거는 국민의 상실감, 정부의 자숙 요청, 복상(服喪) 기간, 외국인방문객 감소 등으로 태국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많이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생산과 소비 활동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전 국왕 서거 직후 태국 정부는 복상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공무원과 국민에게 애도와 자숙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은 단기간에 그쳤으며, 최근 회복 기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표 1. 푸미폰 국왕 서거에 수반한 태국 정부의 주요 요청사항

기간	세부 내용
~ 2016. 11. 12	- 모든 공적 장소, 국영기업, 정부관계기관 및 교육기관에 조기계양 지시 - 국민에게 오락을 삼갈 것을 정부가 요청(서거 후 30일간)
~ 2016. 12. 01	- 새로운 국왕 즉위
~ 2017. 01. 21	- 문화부가 영화관과 가라오케 등에 요란한 행사 자제를 요청(서거 후 100일간)
~ 2017. 10. 13	- 공무원, 국영기업 종업원, 정부기관 직원은 상복 착용(서거 후 1년간), 단 일반국민은 자유

자료: 稻垣博史(2016. 12), 「前国王崩御後のタイ経済展望」, みずほ総合研究所, p. 3.

- 위축을 보인 분야로는 주류업계, 광고업계, 향락업소, 공연이나 이벤트 등 소비활동을 들 수 있으나, 이들 분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은 국왕 서거에 따른 임시휴업이나 조문으로 인한 극히 일부의 차질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검은 상복 착용과 국민의 조문행렬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업종(검은 천, 여행업, 서적 등)이 등장함.
- 푸미폰 국왕 서거 직후 불안양상을 보였던 대(對)달러 환율과 주가지수(SET Index)는 12월 중순 이후 안정되거나 상승 기초를 보이고 있고, 10월과 11월에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도 12월 들어 회복세를 보임(그림 1과 2 참고).

1) 2016년 12월 1일 왕위 승계와 관련한 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와치라롱꼰 왕세자의 왕위승계 수락이나, 본 원고에서는 편의상 승계로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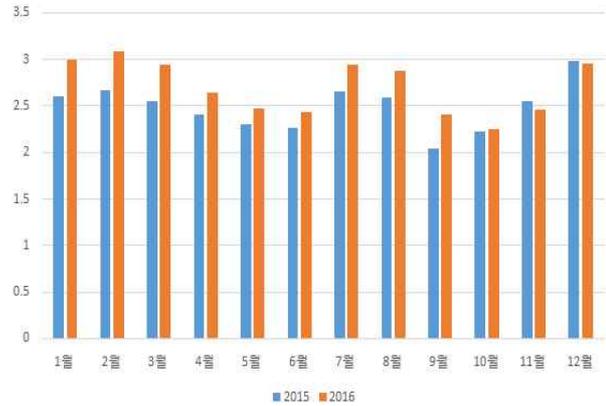
- 특히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11월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왕 서거의 영향보다는 태국 및 중국 정부가 9월 이후부터 저가단체여행(Zero Dollar Package Tour)을 단속·규제함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데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sup>2)</sup>

그림 1. 국왕 서거(10. 13) 전후 태국 환율 및 주가 변화



주: 2016년 9월 1일=100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7.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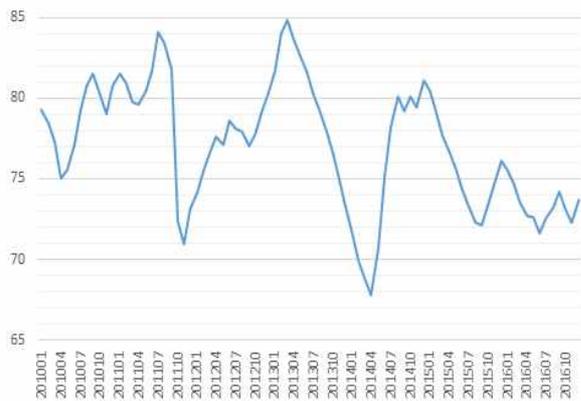
그림 2. 태국의 최근 월별 외국인 관광객 수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7.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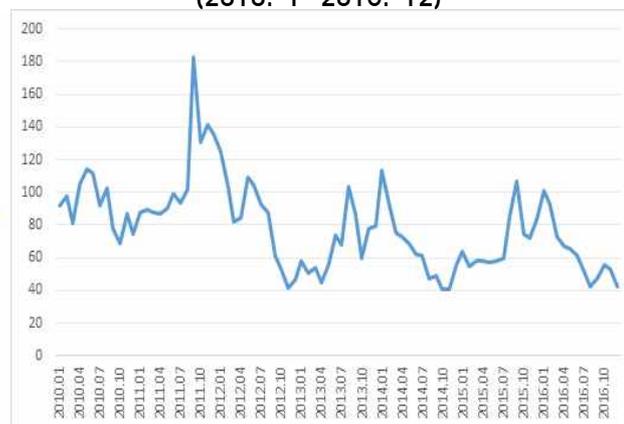
- 푸미폰 국왕 서거로 상승 기조가 꺾인 소비자신뢰지수(CCI: consumer confidence index)도 12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낮아지던 신용부도 스왑프(CDS: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 전 국왕 서거 직후 일시 상승하다가 다시 안정되고 있음(그림 3과 4 참고).

그림 3. 소비자신뢰지수(CCI) 추이 (2010. 1~2016. 12)



주: CCI는 6개월 후의 지역경제, 고용, 가계수입 등에 대한 전망지표.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7. 1. 10).

그림 4. 태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2010. 1~2016. 12)



주: THAI CDS USD SR 3Y D14 Corp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7. 1. 10).

- 2) 실제 2016년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여행객에 대한 저가단체여행을 집중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8.8% 증가한 3,2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태국의 2016년 관광수입은 1조 6,700억 바트(약 465억 달러, 2015년 대비 15.2% 증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Thailand cracks down on ‘zero-dollar’ tour groups”(2017), *Nikkei Asian Review*. (January 3)

■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라마 10세(Rama X)의 등극은 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종식 여부와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태국 경제의 회복 여부에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음.

-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태국의 최대 국가리스크(country risk)이고,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최대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라마 10세 이후가 주목을 받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프라윗(Prayuth Chan-ocha) 잠정 군사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의 지속 및 변화 가능성과 라마 10세의 경제 철학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라마 10세 시대를 맞이한 태국 경제의 앞날을 전망해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함.

- 우선 2000년대 들어 태국 경제의 저성장 및 침체 현황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그 배경을 분석함.
- 다음으로 태국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정의 조정자였던 푸미폰 국왕 서거 이후, 즉 라마 10세 등극 이후 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정이양 등을 전망함.
- 2014년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프라윗 잠정 군사정부와 최근 등극한 라마 10세의 주요 경제정책과 경제철학을 변화 가능성과 함께 전망함.
- 마지막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 2. 태국 경제의 저성장 현황과 주요 배경

### 가. 2000년대 이후 태국 경제의 저성장 현황

■ 고성장을 통해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해오던 태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며 2000년대 들어 성장률 둔화, 외국인투자 유입 저조, 수출입증가율 둔화 등 각종 지표가 불안 또는 부진한 양상을 보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

- 태국의 GDP 성장률은 2004년 이후 ASEAN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급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수출입증가율, FDI 유입,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등도 큰 폭으로 낮아지거나 혼란한 양상을 보임.

그림 5. 태국의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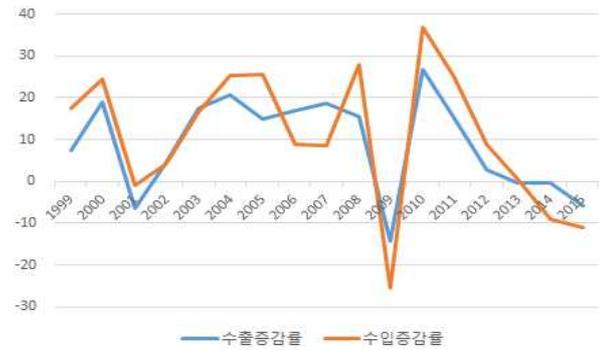
(단위: %)



주: 시장가격(market prices) 기준, 2016년은 ADB 데이터.  
자료: World Bank WDI(검색일: 2016. 12. 16).

그림 6. 태국의 수출입(상품)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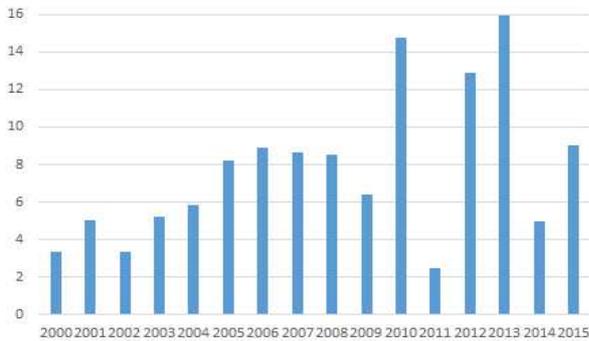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7. 1. 10).

그림 7. 태국의 FDI 유치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1. 10).

그림 8.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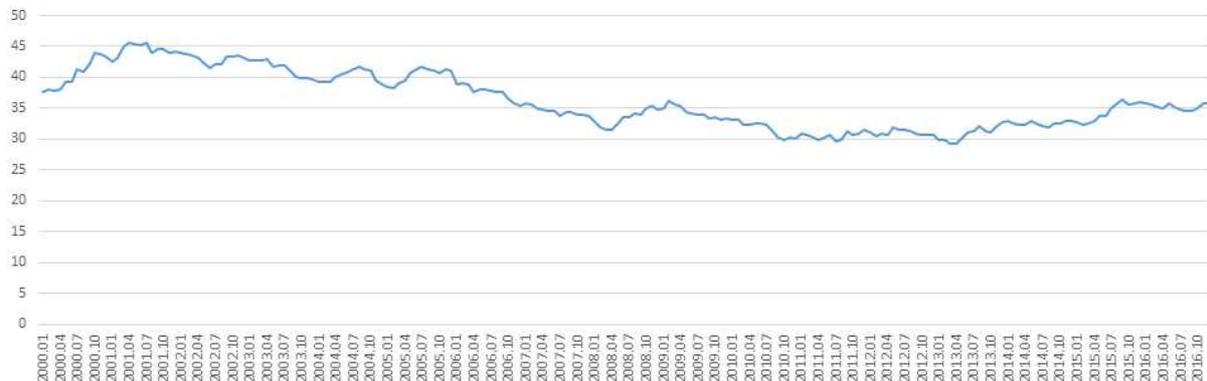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



주: 2016년은 태국 정부 발표치.  
자료: CEIC(검색일: 2017. 1. 10).

그림 9. 태국 바트(Baht)화의 월별 환율 추이(2000.1~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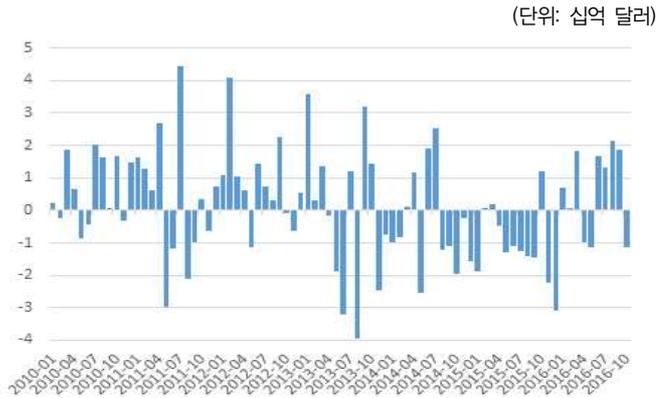
(단위: 달러당 바트)



주: 월별 말일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7. 1. 10).

- 태국 경제는 2010년대 들어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채권+주식) 투자와 CDS 프리미엄,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알려주는 소비자신뢰지수(CCI) 등도 지속적으로 불안조짐을 보임.

그림 10.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채권+주식) 추이  
(2010. 1~2016. 12)



주: 순유입 기준(Net inflow).  
자료: CEIC(검색일: 2017. 1. 10).

- 무엇보다 태국의 10년 주기 GDP 성장률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에서 보듯이 10년 단위의 평균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0년대 태국은 주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선발 개도국인 한국 및 대만과도 비슷한 낮은 성장률을 보임.

표 2. 태국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10년 단위 평균 GDP 성장률 비교(1971~2016)

(단위: %)

연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1971~1980	7.9	9.0	7.8	5.9	7.4	<b>6.9</b>	-
1981~1990	6.4	9.7	6.0	1.7	7.6	<b>7.8</b>	4.6
1991~2000	4.2	6.5	7.1	2.9	6.2	<b>4.5</b>	7.6
2001~2010	5.2	4.4	4.6	4.8	3.9	<b>4.3</b>	6.6
2011~2016 <sup>1)2)</sup>	5.4	2.9	5.1	6.1	2.3	<b>2.9</b>	5.9

주: 1) 2011~2016년은 ADB를 통해 저자 계산. 2) 2016년은 2016년 12월 현재까지의 추정치 사용.  
자료: 1) ADB(2015), THAILAN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Catch-Up, p. 2.  
2) ADB(www.adb.org).

## 나. 태국 경제의 저성장 배경과 원인

-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높은 정치적 불투명성을 가장 큰 배경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태국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태국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인한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퇴진 이후 찬반 탁신 계열간의 갈등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 발생, 잦은 선거와 정권 교체,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됨.

**글상자. 태국의 최근 주요 정치 동향**

2006년: 탈세·왕실불경 혐의 군부 쿠데타, 탁신 前 총리 사임  
 2007년: 총선 실시, 친탁신 PPP(People's Power Party) 정권 재창출  
 2008년: 불법선거 혐의 PPP 정당 해산, 민주당 정권 출범  
 2009년: 친탁신 단체 UDD 반정부 시위, 국가비상사태 선포  
 2010년: UDD 방콕 도심 시위로 유혈사태 발생  
 2011년: 조기총선, 친탁신 프어타이당 승리로 잉락(Yingluck) 총리 취임  
 2013년: 사면법 입안으로 반탁신 PDRC 정부청사 점거시위  
 12월, 유혈시위와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발표  
 2014년: 2월, 조기총선 실시  
 5월, 권력남용 혐의로 잉락 총리 사임 및 군부 쿠데타 발생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10월, 라마 9세 푸미폰 국왕 서거  
 12월, 라마 10세 마하 와치라롱꼰 왕위승계 수락

자료: 각종 언론보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레드(red) 셔츠라 불리는 친탁신 진영은 농민·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로 2001년 이후 모든 총선에서 승리해왔으나, 부정부패·왕실불경 등의 이유로 반탁신 진영은 물론 군부, 왕실과 갈등관계를 지속해옴.
- 반면 반탁신 진영은 총선을 통한 정권창출에 성공한 바 없으나, 친탁신 정권의 부정부패 및 탁신 前 총리 사면 시도에 반대하며 정권퇴진 시위를 주도함.

**표 3. 태국의 주요 정치 진영별 특징과 최근 주요 사건**

구분		특징	주요 사건
친탁신	UDD	레드(Red) 셔츠, 농민·서민층	2009~10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TRT당	2001년 총선 승리(탁신)	2007년 해체 판결
	PPP당	2007년 총선 승리(사막)	2008년 해체 판결
	프어타이당	2011년 총선 승리(잉락)	2014년 조기총선 승리 무효
반탁신	PAD	옐로우(Yellow) 셔츠, 도시 중산층 친왕실	2006~07년 반탁신 시위
	PDRC	PAD 포함 반탁신 단체	2013~14년 반정부 시위
	민주당	반부패 명분, 2011 총선 패배	2008년 PPP 해산으로 정권창출
군부		왕실 수호, 국가 질서 명분 쿠데타	2006년, 2014년 쿠데타 단행
왕실		높은 국민 지지	2006년, 2014년 쿠데타 승인

자료: 저자 작성.

- 게다가 연이은 군부 쿠데타, 사법부의 쿠데타적 판결, 2016년 8월의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 초안 확정 등은 태국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부모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해온 푸미폰 국왕마저 고령과 건강 이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함.
- 이러한 일련의 갈등 과정에서 푸미폰 전 국왕은 국민의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오므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발생한 두 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의 실권 장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군부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함.
- 게다가 쿠데타를 통해 2014년 8월 출범한 빠라웃 잠정 군사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민정이양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 빠랏 총리는 당초 신속한 정국 안정과 민정이양을 위해 2016년 2월 총선 실시를 약속했으나 개헌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전 국왕 서거 전에는 2017년 하반기에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제정책의 혼선, 국내외 투자 부진, 생산 및 소비 활동 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했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줌.

■ 2011년 이후 연이어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동남아 최대 제조업 생산기지인 태국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자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2011년 대홍수는 6개월간의 집중호우로 전 국토의 2/3를 침수시켜 태국의 생산·공급망(supply chain) 단절뿐만 아니라 수출과 장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 태국은 2011년의 자연재해로 약 42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60년 이후 동남아 국가가 입은 피해 중 최대이자 2015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슈퍼태풍 하이얀(Haiyan)에 의한 피해(약 120억 달러)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임.<sup>3)</sup>
- 이후에도 태국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나 가뭄과 그에 따른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투자환경 악화와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FDI 유입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 수 있음.

- 태국에 대한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09년보다 대홍수가 난 2011년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2014년에 더 많이 위축된 것을 볼 수 있음(그림 7 참고).
- 특히 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투자는 2011년에는 오히려 유출되었으며, 2013년에 1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다시 투자 규모가 대폭 축소됨.

표 4. 주요 국가별 對태국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0
일본	4,400	-1,370	3,707	10,927	2,431	3,023	2,280
미국	1,431	143	3,967	857	2,023	1,101	-112
홍콩	441	272	706	126	1,540	456	937
모리셔스	3,180	722	-156	-351	-20	79	60
싱가포르	1,850	1,016	-1,403	-132	-591	466	1,523
중국	633	21	598	939	-221	241	165
영국령 버진 제도	379	183	172	135	499	1,132	-125
독일	77	457	477	182	-75	132	411
한국	180	97	131	716	248	149	-2
호주	-23	6	277	344	80	657	-12

자료: CEIC(검색일: 2017. 1. 10).

3) 工藤信介(2016), 「データで見るASEAN地域の自然災害と2015年の振り返り」, 『アジアリスク情報』, 2015 No. 3, p. 14, (株)インターリスク総研,

- 태국은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노동자 1인당)과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 역시 둔화되거나 동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아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임.

표 5. 태국과 동아시아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 비교

기간	노동생산성(1명당, 기간평균, %)			총요소생산성(TFP, 기간평균, %)		
	태국	ASEAN 6	동아시아	태국	ASEAN 6	동아시아
1970~1975	3.0	3.8	2.6	0.8	1.7	-0.3
1975~1980	1.0	3.5	2.6	1.0	1.0	0.9
1980~1985	3.1	0.6	2.9	1.0	-2.7	2.5
1985~1990	6.3	4.0	3.8	4.6	2.5	2.1
1990~1995	6.2	5.6	4.4	1.2	1.6	2.3
1995~2000	1.2	0.6	2.8	-2.1	-2.8	1.3
2000~2005	5.2	3.6	4.1	4.3	2.2	2.0
2005~2010	2.4	2.5	6.7	1.4	1.5	2.9
2010~2014	4.3	4.3	5.0	1.9	1.8	1.7
(1970~2014)	3.6	3.1	3.8	1.6	0.7	1.7

주: ASEAN 6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아시아(East Asia)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몽골.

자료: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2016),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6, p. 95.

### 3. 태국의 주요 정책 추진 전망

#### 가. 정치·사회적 안정 및 민정이양

-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은 라마 10세로의 왕위승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푸미폰 국왕 서거 후 왕위승계를 둘러싸고 보여준 왕실, 군, 추밀원 간의 대립은 태국의 정정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라마 10세와 군부 간의 관계 정립, 친탁신계의 대두 가능성, 도·농 간 격차 확대에 의한 대립 재현 가능성 등의 정정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
- 라마 10세의 개헌안 수정 요구(2017년 1월 10일, 국왕 유고 시 섭정 지명에 대한 조항 수정)는 라마 10세로 대변되는 왕실과 군부 간의 관계 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알력으로 볼 수 있음.
- 푸미폰 전 국왕은 그동안 태국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정조정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라마 10세는 국민이나 군부 등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개인적으로 탁신 前 총리와 친분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음.
- 일각에서는 라마 10세가 왕세자 시절 보인 친탁신 반군부 성향이 군부정권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라마 10세의 등극에도 불구하고 빠라웃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진 2018년 이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왕의 신헌법 승인 시기에 따라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빠라웃 군사정부는 당초 총선거를 2016년 2월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신헌법 초안이 국가개혁평의회(NRC)에 의해 부결(2015. 9)되면서 민정이양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음.
  - 특히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신헌법안은 선왕의 서거로 국왕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다가 2017년 1월 10일 또다시 라마 10세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되었던 총선거는 2018년 중반 이후로 다시 미루어지고 이에 따른 민정이양 역시 상당기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워 태국의 Country Risk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 헌법기초위원회(CDC)와 국가입법의회(NLA)에 의하면, 태국은 신헌법 발효 후에도 총선거를 위한 입법 및 행정 절차에만 최소한 18개월이 필요함.<sup>4)</sup>
    - 게다가 푸미폰 국왕으로부터 2014년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바 있는 빠라웃 군사정부는 이번의 왕위승계를 통해서도 정치적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민정이양을 위한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음.
- 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민정이양 이후에도 상당기간 군부의 권력 장악이 가능하고, 탁신이나 탁신파의 정계진출을 제한하고 있어 당분간은 친탁신파의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신헌법하에서는 하원의원이 아닌 자도 총리가 될 수 있고 하원의원 비례대표선출 대폭 확대(16.7 → 30%)와 상원의원 직접 선출제 폐지 등을 통해 군부의 영향력 확대가 보장됨.
  - 특히 빠라웃 군사정부는 민정이양 초기 5년은 이행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원의원 250명을 군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평화질서평의회(NCPO)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신헌법에 포함시킴.
  - 군부는 이미 탁신이나 탁신파의 주요 인물에 대해 정계진출을 금지시킨 데 더해 신헌법을 통해 특정정당에 표가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사법부의 대정부 견제 및 국정개입 권한을 강화함.
  - 친탁신파는 우선 2014년 쿠데타 이후 사실상 붕괴된 정당을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움직임은 라마 10세와 군부기득권층 간의 관계정립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 나. 빠라웃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과 변화

-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절실한 빠라웃 군사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두고 있으며, 이를 민간 소비의 회복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자 ‘경제·사회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핵심정책으로는 ①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 ②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정

4) Oxford Analytica(2017), “New elections in Thailand are unlikely before mid-2018,” p. 1. (January 9)

책 ③ 인재육성이나 R&D에 대한 투자 확대 ④ 국제지역총괄본부(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와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ing centers) 유치 ⑤ 국경지대 경제특구(SEZ) 개발 ⑥ 농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이 있음.

- 이 중 경제적 성과는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며, 농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정은 친탁신 진영의 최대지원지인 농촌과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이러한 맥락하에서 2016년 7월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2026년까지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제12차 5개년(2017~21)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을 발표함.<sup>5)</sup>

- 제12차 NESDP의 주요 세부 목표: ① 1인당 국민소득 1만 3,000달러(2026년) ② 연평균 GDP 성장률 5~6% ③ 싱가포르에 이은 ASEAN 제2위의 경쟁력 ④ 지니계수 0.36 달성 ⑤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법제도 개정 ⑥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의 20~25% 감축 ⑦ 생애교육과 21세기형 교육 커리큘럼 ⑧ 고령자 소득보장 등과 2026년까지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고소득국으로 이행 등.<sup>6)</sup>

■ 뿌라웃 군사정부는 산업고도화와 지방의 산업 육성을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하이테크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고 있음.

- 태국은 2015년 9월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표 6]과 같이 신성장동력 10대 산업(5+5 Targeted Industries as New Engine of Growth)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음.

표 6. 신성장동력 10대 산업(5+5 Targeted Industries as New Engine of Growth) 선정

시기	중단기	장기
주요 목표	미래 성장을 위한 현존 산업 고도화(upgrading)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신산업 개발
5대 산업	미래자동차	산업용 로봇
	스마트 전자(smart electronics)	항공산업
	세계 최고 관광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바이오화학(bio chemical)
	효율적인 농업-바이오 테크놀로지	디지털산업
	미래 식량	의료 및 보건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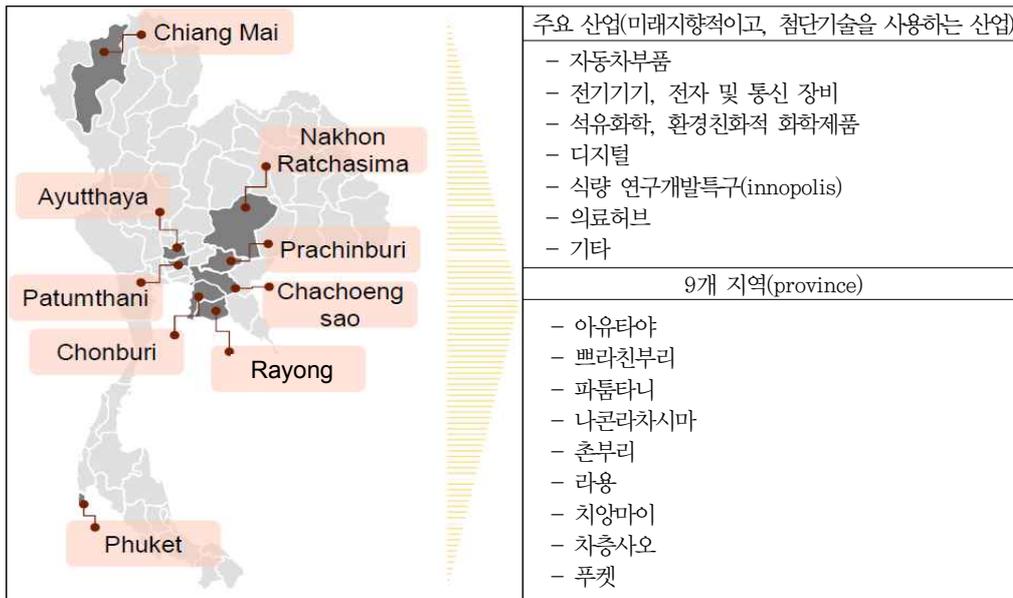
자료: 태국 산업부(Mol).

- 투자를 통해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슈퍼클러스터(Super Cluster)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 교육, R&D, 지원기관 등을 한곳에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5) 海老根知子(2016), “「高所得国」への移行を目指すタイ-政情不安と中国の影響力拡大”, p. 2, 三井物産戦略研究所.

6)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고소득국은 2013년 시점에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1만 2,746달러 이상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함(海老根知子 2016, p. 6).

그림 11. 태국의 슈퍼클러스터 주요 위치와 내용



자료: 태국 투자청(Bol).

- 뿌라웃 군사정부는 최근 도시와 지방의 경제격차 시정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국경지방에 경제특구(SEZ)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지방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Thai plus One’ 전략에 의해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의 산업연계를 촉진해 메콩(Mekong) 지역 전체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있음.<sup>7)</sup>

그림 12. 태국의 10대 국경지대 경제특구(SEZ)와 13개 육성 산업



자료: 태국 투자청(Bol).

7) 2010년대 들어 태국에서는 자연재해 증가, 근로자 임금 급상승 및 전국 단일화, 지속적인 정치·사회적 혼란, 방콕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근로자 부족 등으로 투자환경이 빠르게 악화된 반면, 메콩강 유역 개발(GMS Program)과 경제통합 진전 등으로 이웃 국가와의 연결성(connectivity)은 크게 개선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크게 높이고 있음. 이에 따라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모듈화된 제품의 생산공장을 주변의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생산공장을 활발하게 설립하고 있는데, 이를 ‘Thai plus One’ 전략이라 칭함(곽성일, 정재완, 신민이, 김제국, 라미령(2016),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p. 55).

■ 태국은 ASEAN 경제통합이 심화·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집적지로서뿐만 아니라 무역과 금융, 인재육성 등의 업무도 추가한 외자기업의 포괄적 총괄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지역총괄본부(IHQ)’와 ‘국제무역센터(ITC)’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도입함.

- IHQ와 ITC는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총괄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ASEAN의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태국은 싱가포르와 비교해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이 저렴하고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태국 투자청(BoI)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IHQ와 ITC 인가건수는 각각 29개와 143개이며, 이 중 일본기업이 각각 8개와 101개인 것으로 알려짐.<sup>8)</sup>

■ 이러한 맥락에서 태국의 2017년 경제정책은 ① 재정지출 촉진 ② 수출촉진 ③ 관광산업 회복·내실화 ④ 농촌·농업 지원 확대 ⑤ 투자촉진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sup>9)</sup>

- 재정지출 부문에서는 2017년 예산의 80% 이상을 교통인프라, 동부경제회랑, 특별경제구역 개발 등 대형 재정지출 사업에 적극 투입할 예정임.
- 수출 부문에서는 태국 수출전략 2017(Thai Export 2017)이라는 정책하에 신규시장 개척, 주요 수출품 마케팅 확대, CLMV와의 국경무역 증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무역장벽 모니터링 제도 구축 등의 수출확대 정책을 지원할 계획임.
- 선왕 서거와 저가단체여행 단속으로 태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2017 관광전략 마케팅 추진, 주요 타깃층 대상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태국의 관광산업은 2015년 현재 직접적으로는 총 GDP의 9.3%, 작간접적으로는 GDP의 20.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임(WTTC 2016,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6 Thailand*, p. 1).
- 농업 부문에서는 농촌소득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비용 감소, 대규모 생산, 지역별 특산품 채택·생산, 직거래 활성화 등을 계획함.
- 투자 관련해서는 산업클러스터, IHQ, ITC 등 투자유치 강화, 주요 인프라 개발계획 정보 확산, 생산기지 재투자 지원, 정치로드맵 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심리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임.

■ 뿌라웃 군사정권의 향후 경제정책은 라마 10세의 즉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도농간 격차 해소와 서민층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은 더욱 강조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경제적 지지 기반을 라마 10세와의 관계 정립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 군부정권은 서민·농민층 지지 확보를 위해 서민층 현금지원(1,500~3,000바트/1인), 쌀 생산 보조금 지급(15억 바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9,000억 바트(약 2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 부양책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임.

8) 阿部直樹, 若松寛(2016), 「地域統括の新優遇制度には様子見もーシンガポールとタイの地域統括機能比較 (3) - (シンガポール, タイ)」, 『ビジネスニュース(通商弘報)』, 日本貿易振興機構. (3月24日)

9) NESDB(2016), *Thai Economic Performance in Q3 and Outlook for 2016-2017*, p. 34 참고.

- 군부정권의 과제가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서민 및 농어촌 지원책과 경기부양책이 취약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확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016년 12월 15일 이루어진 개각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채택이나 기존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존의 경제정책 승계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군부는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 및 AEC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1.8조 바트(약 508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개발전략(Infrastructure Development Strategy) 2015~2022’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sup>10)</sup>

## 다. 라마 10세의 경제철학

■ 그동안 태국의 경제정책은 푸미폰 국왕이 추진한 왕실프로젝트(Royal Projects)와 자족경제(Sufficiency Economy), 그리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음.

- 왕실 프로젝트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1950년대 초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주로 농어촌 진흥을 위해 농업, 어업, 임업, 낙농 등의 분야에서 상품 및 기술 개발을 추진, 현재까지 약 2,000개 이상의 비영리 및 반영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태국 왕실자산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이 관리하고 있는 푸미폰 국왕의 재산은 최대 438억 달러(태국 전체 GDP의 10.8%, 2014년)로 추산되며, 주로 부동산과 국내 대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됨.<sup>11)</sup>
- 자족경제는 푸미폰 국왕이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국민을 경제위기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창한 경제철학으로, 불교적 원리(중도)를 기초로 친환경 및 자립·자족적 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는 개발모델로 알려져 있음.
- 자족경제는 푸미폰 국왕의 4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태국 정부와 국민의 경제 행동을 이끄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임.
- 자족경제는 중용(moderation), 합리(reasonableness), 자기면역(self-immunity)을 3대 원리로 균형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 라마 10세는 당분간 기존 푸미폰 국왕이 제창하고 실행해온 자족경제와 왕실사업을 승계하는 가운데 군사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농촌 지원정책과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정책도 지지할 것으로 보임.

10) Duangjai Asawachintachit(2016), "Thailand's Industrial and Investment Policies and Opportunities,"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p. 12.

11) Porphant Ouyyanont(2015), "Crown Property Bureau in Thailand and Its Role in Political Economy," *Trends In Southeast Asia*, 2015 #13,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 31.

- 라마 10세의 공식 즉위가 2017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구체적인 경제철학이나 비전이 발표된 바는 없으나, 지난 12월 1일 왕위승계 수락 시 선왕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라마 10세는 선왕에 비해 국민들로부터의 존경심이나 지지도가 약한 데다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며, 현 집권 세력인 군부와의 관계정립도 필요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음.

## 4. 태국 경제의 과제와 시사점

### 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

■ 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다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함.

- 중진국 함정은 저임금 국가가 빠르게 성장해 중소득국이 된 후 성장 정체를 겪으며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태국 역시 중소득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더욱 적극적인 탈출 노력이 요구됨.
-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과 저비용의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성장을 추구하는 개발모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즉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의미함.
- 중소득국의 기준: 세계은행은 1인당 GNI가 996~1만 2,196달러, OECD는 935~1만 1,455달러에 있는 국가<sup>12)</sup>
- 태국의 1인당 GNI는 1987년에 950달러였고, 30여 년이 경과된 2015년 현재 5,720달러임(World Bank, 검색일: 2017. 1. 13).
- 태국은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sup>13)</sup> 여전히 농업, 관광업,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특정 업종과, 지역적으로는 방콕과 인근 도시에 치우쳐 있고, 전체 노동력의 40% 이상을 농업 부문이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다각화와 고도화가 필요함.
- 게다가 태국의 산업구조가 최대 수출입국인 중국과 최대 투자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인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와 함께 산업구조 다각화와 고도화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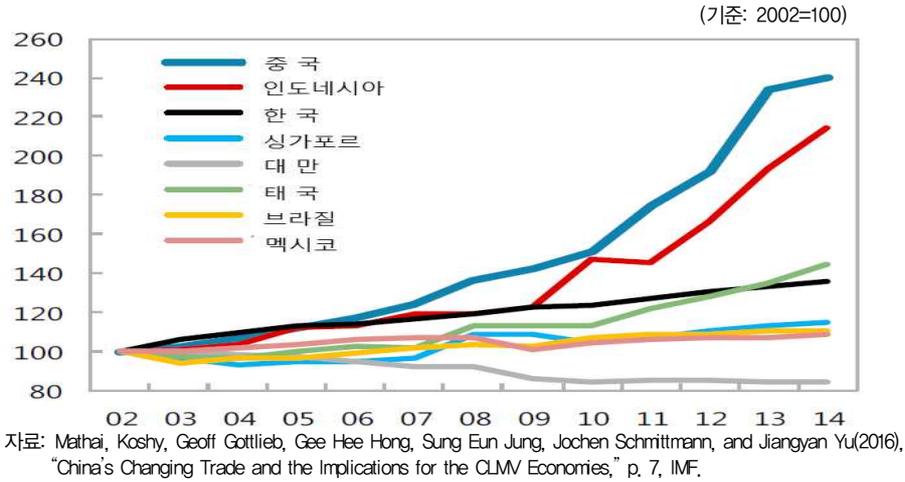
■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하고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상황임.

- Mathai *et al.*(2016)에 의하면, 태국의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이 빠르게 증가해 2013년부터는 한국을 추월할 정도로 높아짐.<sup>14)</sup>

12) 清水聡(2016), 「アジア諸国に求められる経済構造改革と金融部門整備」,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RIM』, Vol. 16, No. 63, p. 84.

13) ADB(2015), *THAILAN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Catch-Up*, p. X.

그림 13. 태국과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추이 비교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력 향상 노력을 뛰어넘는 노력, 즉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고등교육 충실 및 확대, 첨단 제조업 및 R&D 분야 외자유치 확대 등이 필요함.
- ADB(2015) 역시 태국 경제가 성공적인 구조전환과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 향상, 해외로부터 R&D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태국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극복전략이 필요함.

- 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2년부터 비중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 또한 2017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14 참고).

그림 14. 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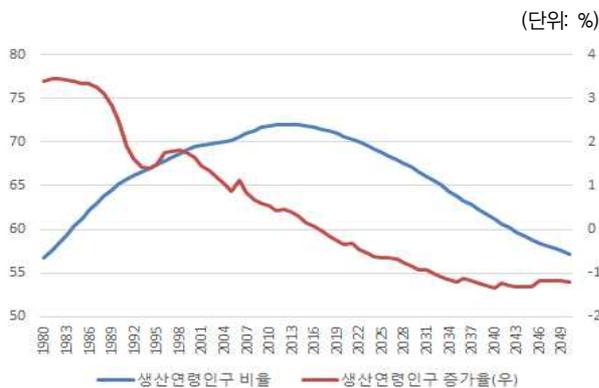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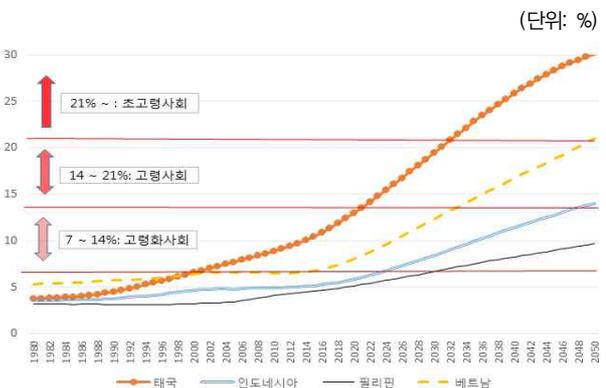


그림 15. 동남아 주요국의 노령인구 비율 추이



14)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의미함.

- 이와 함께 태국은 동남아에서는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22년에는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 이상 21% 미만인 사회), 2033년에는 초고령사회(노령인구 비율 21% 이상인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15 참고).
-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노동력은 물론이고 저축, 투자, 성장, 경상수지, 재정수지와 내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됨.

■ 그동안 소외되거나 개발이 지체된 저성장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발 촉진을 통해 지역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역시 분열된 태국 정치·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

- 태국의 북동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저성장지역은 2013년 현재 1인당 역내총생산(GRP)이 고성장지역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표 7 참고).

표 7. 태국의 지역별 역내총생산(GRP), 인구 및 1인당 GRP 비교(2013)

구분	GRP	인구	1인당 GRP	GRP 증가율
	(2013, 십억 바트)	(천 명)	(바트)	1981~2013
방콕 및 주변 지역	5,723.2	15,203	376,463	5.5%
중부 지역	748.6	3,131	239,078	5.8%
동부 지역	2,327.9	5,406	430,584	7.6%
<b>고성장 지역 소계</b>	<b>8,799.7</b>	<b>23,740</b>	<b>370,668</b>	<b>5.9%</b>
북동부 지역	1,403.3	18,828	74,532	5.7%
북부 지역	1,135.6	11,557	98,268	4.4%
남부 지역	1,114.9	9,044	123,270	4.6%
서부 지역	456.5	3,586	127,294	4.3%
<b>저성장 지역 소계</b>	<b>4,110.3</b>	<b>43,015</b>	<b>95,556</b>	<b>5.2%</b>
<b>태국 총계</b>	<b>12,910.0</b>	<b>66,755</b>	<b>193,395</b>	<b>5.3%</b>

자료: ADB(2015), THAILAN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Catch-Up, p. 6.

- Egawa(2013)는 태국과 같은 상위 중소득국가(upper middle-income countries)에서 나타나는 성장 정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소득불균형(income inequality)을 지적하고 있음.<sup>15)</sup>
- 무엇보다 이들 지역은 태국 전체 인구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탁신파가 모든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반탁신 진영의 입장에서 지역간 소득불균형 해소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임.

## 나. 결론 및 시사점

■ 태국 경제는 선왕 서거 이후의 일시적 침체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대

15) Egawa, A(2013), "Will income inequality cause a middle-income trap in Asia?" Bruegel Working Paper.

이후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고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다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비, 지역간 소득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함.
-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순조로운 왕위 계승을 포함한 불안정 종식과 예측가능성 제공 등이 필요함.

■ 태국은 동남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발달된 제조업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인도차이나 반도의 허브 국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 경제통합 확대·심화와 메콩강 유역개발에 따른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구축 등을 통해 물류망을 포함한 ASEAN의 연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과, 태국이 신흥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CLMV를 아우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허브라는 점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히 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슈퍼클러스터(Super Cluster), 국경지대 경제특구(SEZ) 개발, 국제지역총괄본부(IHQ)와 국제무역센터(ITC), 더 나아가 최근 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경제회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뿌라웃 군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정정책, 특히 인프라 확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참여방안 수립이 필요함.
  - 태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인 고속철은 중국과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추가로 진행될 많은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다만 기존 수자원관리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업중단 시 책임소재 혹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계약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한국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중진국 함정 탈피 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KIEP